

특집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13
/ 임성일
 - 지방재정공개제도의 강화방안 : 30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조경연
 -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재정투명성 제고 50
/ 박완규
 - 지방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방향 67
/ 우명동
 - 지방재정 투명성의 세계적인 동향과 사례 83
/ 이원희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재정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곧 이어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새롭게 정립되는 재정의 신 규율을 발 빠르게 흡수하면서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그러한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 나르고 있지만 재정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추진원리로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표방한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각국은 한마디로 국(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경제적 가치(VFM: Value for Money)”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는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선택되었고 전통적인 정부독점적 서비스 공급방식보다 민영화(privatization) 등 정부·민간부문의 협력적 서비스 공급방식이 선호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권력에 의한 집중과 통제방식 대신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모색되었다. 각국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강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 시장원리의 적용(공공부문의 경쟁체제 구축), 정부활동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성과

지향의 정부 관리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부개혁 조치와 변화가 희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정부가 소유하는 재정정보가 전향적인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재정·재무정보의 공개 없이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효율·효과·책임성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활동들은 궁극적으로 국(주)민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국(주)민에게 책임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적절히 공개할 때 그 정부는 비로소 투명한 정부라 불릴 수 있다.

재정 투명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가능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은 납세자인 주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와도 개념적으로 관계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 및 참여가 동시에 활성화될 때 높은 수준의 재정 투명성이 실현될 수 있고 또한 정부 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공고해진다.

요약하면, 재정 투명성은 재정·재무정보의 공개를 제도적 수단으로 취하며¹⁾,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두는 책임 있는 정부의 구현”에 있다. 이 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과 질, 적시성, 방법, 주민과의 교감(의사소통), 정보 활용 및 사후조치 등의 전반적인 모습에 따라 재정 투명성의 질적 수준이 가늠될 수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정부의 재정활동 전반(계획, 집행, 회계결산, 산출 및 성과 측정과 예산반영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때 정부 활동에 대한 주민의 감시·견제가 가능해지고 그것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²⁾. 아울러 재정정보의 공개는 정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이해 조정에도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기업가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그밖에도 재정정보의 공개는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관리와 성과 개선, 경쟁체제 유도,

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재정의 주요 정보를 적절히 추출하고 가공하여 그것을 주민에게 공시해 주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현재 정보공개법을 비롯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행명령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합동평가, 자체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고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납세자소송제 포함)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정부와 주민간의 의사소통 원활화, 내부관리의 개선, 부정·비리의 예방, 효율적 자원안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IMF는 재정 투명성을 재정 관리의 필수요건이자 “훌륭한 정부 관리(good governance)”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IMF, 2001, p. 1).

이와 같은 재정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IMF, OECD 등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들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및 예측 정보를 적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근년에 선진국들이 예산의 계획과 집행은 물론 집행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와 영향에 관한 정보를 성과보고서나 성과공시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변화하는 “범세계 기준(global standard)”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맥락에서이다. 특히, 자율권의 신장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의 구현을 새로운 정부운영의 원리로 채택하는 분권형 민주국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련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국정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이슈가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것은 재정 투명성이 재정운영의 효율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주는 인프라로서 뿐 아니라 자율에 대한 책임성을 견제해 주는 수단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의 국(시)정 참여가 다양한 정보매체와 경로를 통해 전에 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재정의 투명성을 규정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유용하고 의미가 깊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재정 투명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파악하면서 투명성 확보에 따른 효과와 주요 관련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재정 투명성의 개념과 세부 내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재정 투명성을 확보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관해 논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재정 투명성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이 글의 종합 및 결론부이다.

II. 재정 투명성의 개념과 내용

재정 투명성이란 국(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행하는 모든 예산활동(계획 · 편성 · 집행 · 환류 등)에 관한 원 정보와 가공 정보를 정보이용자(국민 등)의 관점에서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와 공개에 따른 달성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산의 계획과 편성, 지출, 회계 결산을 비롯하여 예산외 자금 활동(extrabudgetary activities), 예산 및 예산외 자금 운영에 따른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주요 사업의 비용과 편익,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평가 및 감사결과, 주요 정책변화 등 정보이용자(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재정·재무정보가 포함된다.

재정의 투명성 개념과 실천지침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IMF에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다음의 네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IMF, 2001, pp. vii~7). 그것은 (1) 명확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Clarity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2) 국민의 정보이용 가능성(Publ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3) 예산과정(예산의 준비, 집행, 보고)의 공개성(Open Budget Preparation, Execution, and Reporting), (4) 완전성 보장(Assurance of Integrity: 재정자료 및 정보의 질에 대한 독립적 검증 보장)이다.

정부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이란 정부의 구조와 기능, 중앙·지방정부간 책임분담 및 삼권분립, 예산 및 비예산 활동에 대한 조정 · 관리 메커니즘의 존재, 정부와 비정부 공공부문간의 관계 정립, 정부의 민간부문 관여에 대한 명확한 운영원칙, 재정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 행정적 틀 구축 등을 보다 분명히 실천하는 관점에서의 재정 투명성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보이용 가능성은 ① 국민들이 정부활동의 과거·현재·미래 예측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② 시의 적절하게 재정정보를 공급받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와 노력을 강구하는 관점에서의 재정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에는 중앙·지방정부를 망라하는 모든 예산회계 정보의 공개를 필두로 개별 정부 각각의 재정 상태와 정부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재정상태의 공개 그리고 연도간 예·결산의 비교 및 재정·경제의 중기 예측, 우발채무,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유사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 채무·자산 정보 등에 대한 공개가 핵심 사항으로 포함된다. 후자에는 재정정보 공개의 시의 적절성 이슈가 주를 이루면서 주요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전예고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산과정의 공개성은 예산의 편성을 위한 준비단계로부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보고에 이

르는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여기에는 ① 예산서 속에 재정정책·재정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거시경제의 틀(국가), 예산의 정책기조, 주요 재정위험 가능성 등에 관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② 예산정보의 세분화된 분류, 주요 재정사업의 목표달성도(성과) 보고, 재정수지·건전성 등 재무상태, 재정집행의 상태 및 결과에 대한 감시·보고, 통합회계, 회계(성과) 감사 등에 관한 재정정보의 적절한 공개 그리고 ③ 각종 예산회계보고서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및 주민보고를 실시하는 것 등이 세부 실천지침으로 포함되어 있다.

완전성 보장이란 국(주)민에게 보고되는 모든 재정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의 재정 투명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산회계정보의 최근 경향보고를 비롯하여 국제적 표준에 입각한 예산회계기준의 적용, 재정통계의 일관성 및 정확성 유지, 제3의 독립기관에 의한 감시·감독체계 가동 등이 핵심적인 점검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다.

코피츠와 크레이그(Kopits and Craig) 또한 재정 투명성에 관한 유용한 정의를 해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재정 투명성은 한마디로 국민(대중) 전체를 향한 개방성(openness)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재정정책의 의도, 공공부문 계정 및 예측 등 주요 정부활동에 관한 정보를 신뢰성 있고, 종합적이고, 시의성 있고, 이해가능하며, 국제비교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리, 공개하는 이슈들이 연계되어 있다. 이 때 개방된 재정정보는 유권자와 투자(금융)시장이 정부의 재정 상태와 재정활동에 대한 비용·편익(현재의 비용과 편익은 물론 미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포함하는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 투명성 정의와 투명성 담보방안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정보가 거시적 관점에서 단·장기의 재정 상태와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깊이 새길만하다.

OECD(2001)에서는 재정 투명성 중에서도 특히, 예산 투명성(budget transparency)을 강조하고 있다. OECD에서 의미하는 예산 투명성은 정부 정책의 의도, 형성,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OECD, p. 3). 이러한 개념 정의는 앞서 파악한 IMF의 재정 투명성 개념 중 세 번째 개념 즉, 예산과정의 공개성과 대동소이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예산활동과 결부되고 예산서 속에 정부 정책의 목적과 의도와 집행계획이 집약된 수치로 담겨 있음을 인식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관련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체계와 수준은 실로 정부의 투명성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산

투명성은 재정책임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³⁾.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투명성은 크게 다음의 세 부문 - ① 정부가 산출해내는 주요 예산보고, ② 예산보고서 중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재정·비재정적 성과정보 포함), ③ 예산보고의 질과 완전성을 구현하는 관행 - 과 관련이 있다.

먼저, 예산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예산보고서에 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다시피 예산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문건이므로 그 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정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서의 보고와 공개에 있어서는 본 예산은 물론 본 예산 성립 이전의 검토문건인 예비(사전)예산보고서(pre-budget report), 월별예산보고서, 연도중예산보고서(mid-year report), 중장기예산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보고를 행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제고를 모색한다.

그 다음으로는 예산관련 정보 중 세부공개(specific disclosure)를 통해 예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가정, 조세지출, 채무와 재무자산, 비재무자산, 피고용자연금의무,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등에 관한 정보 축적 및 공개가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보고의 질과 완전성을 높여서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는 회계정책, 내부통제·감사 관련 제도적 장치와 책임성 확보장치, 회계감사, 국(주)민과 의회의 통제·점검 장치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규정하고 지향하는 재정의 투명성은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가능한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회계 및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재정 투명성 사안으로는 재정정보의 공개 방법 및 수단에 관한 것과 주민참여(예산과정 및 정보이용 결과의 환류)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재정 투명성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는 정보의 전달 및 공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하고, 또한 전달된 정보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정부활동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은 다각도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집행한 예산(즉, 재정사업)의 회계처리 내역을 주민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의 책임 정도를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명 책임” 속에는 회계적 설명 책임 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성과나 효과에 대한 설명 책임이 포함된다.

III. 재정 투명성 확보에 따른 긍정적 효과

앞에서는 재정 투명성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서론에서는 재정 투명성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 내지 영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경험하게 될 긍정적 효과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 투명성은 자치단체의 내·외부 고객에게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한다.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내부조직과 지방의회가 행하는 각종 의사결정과 감시·견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볼 때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재정정보는 조직의 내부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자치단체 외부적으로는 주민 등 외부고객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성을 갖게 되면서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감시·견제·의견개진 등이 가능해진다. 즉, 재정 투명성은 주민에 의한 민주적 재정 통제를 가능케 한다.

전통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의회가 담당해 왔지만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공개가 활발해지면서 차츰 주민에 의한 실질적이고 직·간접적인 통제와 감시가 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법적 기반을 토대로 확대일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의 행·재정활동 참여기회가 증가하는 현상은 비록 제한적이나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고양시키고 민주적 재정분권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재정 투명성은 정부 활동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지니는 주체들⁴⁾에게 다양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야기한다. 8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쟁체제가 가동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에 경쟁 환경을 유발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와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개방시켜 줄 때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처럼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도 사회 각층을 향해 풍부하게 개방시켜 줄 때 정부활동의 효율성이 진작될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는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되면 될수록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4) 정부의 활동에 이해관계를 지니는 모든 주체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 속에는 국민(주민)을 비롯하여 공무원, 의회 의원,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언론 매체, 투자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

셋째, 재정 투명성은 “정보 비대칭(asymmetry of information)현상” 등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불공평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오늘날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높아진 상태이다. 어떤 면에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F. Bacon)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날처럼 설득력을 갖고 피부에 와 닿는 경우도 없었을 것 같다. 공공의 정보는 단순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차원을 넘어 일상의 시민 편익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보 비대칭현상” 또는 “정보독점현상”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성과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이론에서 분명히 기술하고 강조하는 바이다. 이들 현상은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같은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주성, 공정성 등 사회운영의 기본원리와의 배치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보독점현상이 존재할 경우 수요·공급자간에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과 사회적 불공평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공적 정보들을 일반 대중에게 적시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해 줄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될 사회적 거래비용이나 비효율성을 크게 줄여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개로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는 민간, 공공부문 할 것 없이 소수의 정보독점 등에 따른 “정보 비대칭현상”을 교정하는데 유효하다. 한마디로, 양질의 다양한 객관적 정보가 적절히 공개될 때 경쟁시장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보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다(OECD, 2001).

넷째, 재정 투명성은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요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재무정보(단위비용, 예산원가 등)와 성과 정보가 공시될 경우 자치단체간의 상대비교는 물론 민간부문과의 상대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정보의 개방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에 의한 견제와 점검을 촉발시키며 그것은 나아가 경쟁과 효율 그리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업무나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과 편익(또는 성과)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것은 곧바로 유사한 업무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간부문(기업, 종교단체, 시민조직 등)과의 객관적 비교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방식과 재정지출의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마침내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급방식을 바꾸게 만들고(민간위탁, 민영화 포함), 주민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질과 양 면에서 개선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해준다.

다섯째, 재정 투명성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비교정보나 성과측정정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한다. 예산에 대한 비용산정(budget-costing)체제가 구축되고 회계결산과 성과지표를 토대로 하는 재정성과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면 자치단체는 사회적 압박이라는 여과장치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다음번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종전과 다른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즉, 자치단체들은 기능별, 사업별, 성질별 재정성과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의 여부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투명성 정보에 기인하는 그와 같은 변화는 결국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활동을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국가들이 좋은 정부활동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Hameed, p. 4)을 인식할 때 재정 투명성 이슈는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값어치를 지닌다.

여섯째, 재정 투명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에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것은 앞서 몇 차례 언급한 재정정보 공개의 “상대비교”와 “사회적 압력” 논리나 또는 정치적 경쟁 환경 등의 메커니즘과도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기준인 지방채 발행과 자산상태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제공될 경우 자치단체는 자동적으로 외부의 견제장치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재정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실증분석되고 있다. 1999년에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채무수준과 재정 투명성 수준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ameed, p. 7). 즉, 재정이 투명한 국가일수록 국가채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일곱째, 재정 투명성은 각종 부정과 비리의 소지를 근절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비리와 부정과 부패가 감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문헌(2001, 2004)에서는 재정 투명성이 재정 및 경제시장을 교란시키는 사기와 시장 조작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탄지(V. Tanzi)는 각 정부가 재정 투명성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부패 감소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낱알이 공개될 때 행정활동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와 연관된 부정의 소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부예산활동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뵈히 들여다 보고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부정·부패의 개입 여지가 매우 협소해지기 마련이다.

사실, 부정과 부패는 정치·사회·문화와 역사적 관행, 공직사회의 운영원리 등 폭 넓은 이슈들과 관계가 있지만, 객관성 있고 깊이 있는 재정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책임성 확보에 압력을 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유추된다. 오늘날 적극적 재정정보의 공개와 함께 보다 세련된 감사기능의 확립은 부정과 부패를 줄이는 핵심 사회 메커니즘으로 간주된다.

여덟째, 재정 투명성은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주)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촉매제로서도 유용한 기능을 한다. 개인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민간에도 의사소통의 결핍에서 오해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과 달리 정부는 불특정 다수인 국(주)민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다름아닌 공적 정보의 공개(공유)와 그에 대한 주민으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이다. 정부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정부 정책의 목표와 진행상태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동시에 주민만족도, 여론 조사, 기타 경로를 통해 국민과 주민의 반응 및 의견개진을 피드백 받을 수 있다.

현대행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정보교류)과 적시의 정책 환류가 이루어질 때에만 행정서비스의 공급 효율성과 수요(주민) 만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아홉째, 하미드(F. Hameed)의 실증분석⁵⁾에 따르면 선진국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실증분석이 없어서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정 투명성이 확보되는 자치단체일수록 선진 자치단체의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명성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권의 평등성, 보편성 기준을 충족시켜 주

5) Hameed는 IMF의 재정 투명성 지침을 토대로 실증분석 대상을 크게 네 부문 - 데이터 완전(확증)성, 중기예산(수립), 예산집행보고서(세입세출결산서), 재정 위험성 공개 - 으로 구분한 다음 관련 지표/지수를 활용하여 국가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참조).

면서 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과 효과를 창출한다.

IV. 재정 투명성 구현의 향후 과제⁶⁾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IMF, OECD 등의 “범세계 기준(global standard)”을 기본적으로 섭렵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와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 자세를 취하면서 여기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기초와 실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활동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예산서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치단체들이 보고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예산서의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재구성,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 다음의 재정정보들 - 예산의 계획 및 편성, 연도 중 예산집행 현황, 추경편성 요인과 실태, 예산 위험성, 주요 예산정책 변화 등 - 을 새롭게 추가·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 등 외형적 조건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예·결산 및 채무 등에 관한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본 경험이나 2005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재정정보 공개의 질적 수준은 국제기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수준 미달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수준은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창의성이 부족한 피상적 재정정보 공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 이용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원 정보와 가공정보들을 알기 쉽도록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초예산과 결산정보 이외에도 예산의 계획 및 편성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와 추경예산 정보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분기 또는 반년 단위로(필요 시 수시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 꾸려가는 예산활동의 영역을 창의적으로 고안하고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예산회계정보들을 연도별 경향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 정리하는 동시에 이들을 객관적인

6)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임성일의 글(“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2005년 제2호)을 상당 부분 참조하고 있다.

미래예측 정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지역단위 중소 규모 재정지출사업, 주민관심사업, 지역갈등사업 등의 진행 상태와 실적 그리고 문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시의적절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재정사업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 내용은 물론 잘된 점과 못된 점 등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면서 겸허하게 알려주는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사항은 자გი지역의 발전에 관한 것과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은 주민 관심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충족해주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밀착된 미시 재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그와 관련된 주민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재정 투명성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자치단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셋째,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재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내용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화 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보의 전달수단을 다양하게 선택(보고서,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기관 및 백화점·편의점 비치, 교육기관 활용 등)하는 한편 그림, 그래프, 삽화 등 창의적 기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를 가공하는 노력을 가해야 한다⁷⁾. 이 과정에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가,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다음 재정정보의 전달방식과 활용 및 환류방안 등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현재 상태와 사용내역은 물론 중장기 관점에서의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

7) 재정정보의 공개는 주민 친화적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임성일, 2005 참조): (1) 자치단체 프로필(profile)의 압축 표현, (2) 주민의 이해 용이성 및 친절한 정보 제공(그래프 사용 등 시각적 효과), (3) 역사적 변화 추이 및 기간별 비교(시계열 경향분석 및 유사단체 비교), (4) 참고 및 배경정보(contextual information), (5) 알기 쉬운 성과평가 정보 제공, (6) 벤치마킹(benchmarking)의 적용 및 구체적 목표 제시(가장 미진한 분야, 용이하고 효과적인 분야의 파악과 개선목표 설정 등), (7) 전년도 주민 참여와 주민에 의한 환류 사항

을 매우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지방세수입에 대한 예측오차(전국 평균)가 매년 10~2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당초예산과 결산간의 차이나 중기재정계획의 연도간 차이 등에 있어서도 쉽게 관찰되고 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단년도 관점에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측정되고 파악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할 때 재정예측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장기 재정예측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것을 적절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성과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책임행정의 구현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성과에 관한 정보는 여러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것은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통제 측면에서 유용하며, 의회의 관점에서 집행부가 시민이 부담한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성과정보의 공개를 통한 시민들의 성과 개선에 대한 요구 압력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다.

근년에 와서 VFM감사 등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효율적·효과적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재정지출의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적절히 공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성과측정 결과(각 국별로 내용과 수준의 차이는 있음)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는 주요 재정사업별 성과정보(예산·비용 정보, 성과목표 대비 목표 달성도(금년도, 과년도 대비 등)), 목표달성 관련 원인 및 배경 설명, 예산(추정치, 확정치)과 결산의 차이, 성과목표와 성과 달성도간의 차이분석 및 설명, 유사 자치단체 비교, 주요 재정사업 관련 필수적 배경정보(contextual information), 중점 개선 사항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재정 투명성의 구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단계적 실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자치단체가 목표로 삼고 있는 특정 재정분야의 목표달성(준거) 수준(국내외 사례 참조, 자체 설정 등)을 비교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와 비교한 해당자치단체의 현재 상태와 향후에 성취 가능한 계획, 방법, 시기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수범사례(best practice)와 잘못된 사례를 자치단체와 주민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면서 재정운영의 혁신과 창의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의 증진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일곱째,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정보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행

정창구 등 관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정보의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과 정보수집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행하고, 가능하다면 시의성원칙에 따라 자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회계연도 중에 행한 재정공시의 내용을 정리, 수록하는 재정공시(개)보고서를 작성, 공표해야 한다.

여덟째, 재정정보의 공개가 실질적으로 정부 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공개제도의 운영·관리를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비를 비롯하여 재정정보의 분석·공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솔선수범하여 재정 투명성에 대한 “자기 규율”을 제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접근자세이다. 그리고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검증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임성일, 2005).

- (1) 재정의 현황과 운영 실태 및 실적에 관한 일반 정보(예산 및 결산)
- (2) 지방채무·자산, 기금 등 예산외 자금, 의존재원,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
- (3) 단기 및 중기 재정 예측 및 계획
- (4) 주요 예산과정 및 주요 재정통계
- (5) 재정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화
- (6)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운영 실태 및 성과(투자사업 심사결과 포함)
- (7) 주민과의 재정부문 약속 이행 상태
- (8) 각종 지방재정평가 결과(상위정부 평가 및 자체평가)
- (9) 주요 지방재정 감사 결과
- (1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활동 전반에 관한 성과측정 정보
- (11)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투입, 산출물, 효율성, 효과성 정보)
- (12)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자체 위상, 전국 및 지역 평균 등에 관한 정보
- (13) 재정집행의 문제, 한계, 개선 계획
- (14) 주민의 현재 및 장래 재정부담(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등)
- (15) 당면한 재정의 위험 요인과 불확실성

(16) 주민의 관심사가 높은 예산 및 투자사업 정보(투입, 만족도, 사업 영향 정보)

(17) 기타 과거·현재를 비교해 주는 재정통계 등

마지막으로, 재정정보의 공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특정한 형식과 틀로서 강요할 성격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 투명성이 진정한 정책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일정한 “사회적 긴장과 압력(social pressure)”을 느끼는 가운데 자기 규율을 갖고서 추진해 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전적 여건이 조성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주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⁸⁾. 지금까지는 예산의 계획·편성·공개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기의 역할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민의 잘못이기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의 실질적 필요성과 분권적 민주주의의 운영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의 계획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의 참여가능 영역과 기회를 넓히는 한편 적극적인 관련 재정정보의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V. 종합 및 결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정보를 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재정 투명성의 목표이자 수단이며, “훌륭한 정부 관리(good governance)”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것은 정부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종의 시금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재정 투명성 이슈는 세계적으로 정부개혁의 핵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더불어 민주적 분권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8) 주민의 예산참여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보다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점과 재정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예산의 계획과정에서 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만들어 주거나(공청회, 인터넷 설문조사, 직접 참여 등) 결산 정보를 주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 주민들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분석, 비판, 정책 건의 등)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은 정부의 관리 철학이나 운영주체의 가치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보아 정부 활동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국정 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인식할 때 지방재정의 투명성 이슈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그것은 특히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의 조화와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구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형식적 공개의 틀을 벗어버리고 정보 이용자의 수요와 편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인식을 갖는 한편 재정정보의 공개가 재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기준과 수단을 제시하는 접근방식을 지양하고⁹⁾, 이해당사자의 필요와 공감을 수용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는 나름대로 국제적 투명성 기준과 지침을 토대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주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추면서 재정 투명성 이슈를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일정한 관리의 틀과 엄격한 규율을 설정한 다음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경주하고 세련된 견제 장치를 보완·개발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사회가 모든 재정정보(성과정보 포함)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결과를 환류시켜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재정 투명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

9) 예컨대, 국가는 재정 투명성의 구현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일정한 모니터링(monitoring)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한해야 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매체 등은 재정정보의 이용자로서 자기 역할(정보 활용, 정부 활동의 통제·감시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임성일, “OECD 국가의 성과중심 재정운영: 최근 동향과 시사”, 지방재정, 제1호, 2005.
- 임성일,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제2호, 2005.
- Hameed, F., “Fiscal Transparency and Economic Outcomes,” IMF Working Paper, WP/05/225, 2005.
- IMF,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2001.
- IMF, “Draft Guide on Resource Revenue Transparency,” 2004.
- Kopits, G. and J. Craig, “Transparency in Government Operation,” IMF Occasional Paper, No. 158, 1998.
- OECD,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2001.
- OECD, “Public Sector Modernization: Governing for Performance,” OECD Observer, 2004, 8.
- Tanzi, V., “Corruption Around the World,” IMF Staff Papers, Vol. 45, 1998.

〈부록〉

● 재정 투명성 부문(Fiscal Transparency Clusters) ●

부문(Cluster)	투명성 관행(Practices of Transparency)
데이터 완전성 (Data Assurance)	예산분류(Budget Classification) 데이터 공개(Release of Data) 예산포괄범위(Budget Coverage) 미래예측에 대한 독립적 평가(Independent Assessment of Forecasts) 예산 현실성(Budget Realism)
중기예산 (Medium-term Budgeting)	정책목적(목표)(Policy Objectives) 미래 재정 추정(Forward Estimates) 중기재정틀에 의한 예측 (Projections Guided by Medium-term Quantitative Framework) 새로운 정책의 비용(New Policy Costs) 재정/거시 위험성(Fiscal/Macro Risks)
예산집행 (Budget Execution)	회계제도(Accounting System) 외부감사(External Audit) 결산(Final Accounts) 내부감사(Internal Audit) 회계연도중 예산보고(Mid Year Reporting)
재정 위험성 (Fiscal Risks)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부채(Debt) 유사재정활동 (Quasi-Fiscal Activity – Financial, Quasi-Fiscal Activity – NFPE 3/)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자료: Hameed, op.cit., p. 12.